신당 창당 선언한 무소속 박주선 의원 인터뷰

"신당은 민심 명령… 야당의원 탈당 줄 이을 것"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의 박주선 의원 사무실에 가면 '승풍파랑'(乘風破浪)이라고 쓰인 액자가 벽에 걸려 있 다. '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 나간다'는 뜻으로, 원대한 포부를 비유하는 말이다.

사법시험 수석 합격의 촉망받는 엘리트 검사로 주목 받던 박 의원은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전격적인 발탁으로 국민의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민정+인사수석)을 역임하며 당시 법무장관 후보 1순위로 꼽히는 등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DJ 정부 '옷 로비' 파동을 계기로 관직에서 물러나 정치권에 뛰어든 박 의원의 정치 역정은 '파란만장' 그 자체였다. 네 번 구속되는 시련 속에서 세 번을 무죄로 풀려났고 한 번은 벌금형(80만원)에 그쳐 '불사조'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네 번의 국회의원선거에 세 차례(16, 17, 19대)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은물론 옥중 출마를 감행하기도 했다.

3선의 중진으로 성장,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그가 최근 정치 생명을 걸고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친노 패권주의가 장악한 새정치연합으로는 정권 창출이 불가능한 만큼, 신당창당으로 호남 정치권의 활로를 찾고 야권 재편에 성공해 정권을 찾아오겠다는 것이다.

이는 파란만장한 정치인 박주선의 마지막 도전이 될수도 있다. 그의 결단이 바람을 타고 격랑의 시대를 헤쳐 나갈 것인지 주목된다. 광주일보는 30일 박주선 의원을 만나 신당 창당과 야권 재편 등의 생각을 들어봤다.

친노 패권주의 정권 창출 못해 이달 추진위 구성 내년 1월 창당 총선서 제1야당 도약 할 것

다음은 일문일답

-신당 창당이 최선의 방법인가.

▲새정치연합은 민심으로부터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 혁신위가 긴급 심폐회생에 나섰지만 분열과 배제의 논란에 휩싸이며 실패했다. 조금이라도 희망이 남았다면 왜 탈당하고 신당 창당에 나서겠는가. 정권창출의희망 없이 침몰하는 정당에서 국회의원 배지나 달자고안주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정치 생명을 걸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안의 길을 찾는 것이 책임이고 도리다.

-신당 로드맵은.

▲10월 중에 신당 추진위를 구성할 계획이며 여타 신당 세력과 '정권창출을 위한 원탁회의'를 구성, 연말까지 통합의 가시적 성과를 거둘 생각이다. 이 과정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명망가, 참신한 인물들이 참여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1월에 신당을 창당한다는 방침이다.

_ -현역 국회의원 참여는.

▲중도 진영의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탈당이 조만간 줄을 이을 것이다. 올 연말에는 교



섭단체(20명)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연초에는 규모 가 더 커질 수 있다.

-너무 장밋빛 전망 아닌가.

▲민심은 거역할 수 없다. 신당창당은 민심의 명령이다. 말을 아끼며 민심을 주시하고 있는 당내 중진 의원들이 결단할 것이다.

-야권 분열의 우려도 크다. ▲지나 051년 기대주 저 대

▲지난 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던 상황과 같다. 당시 DJ는 야권 분열이라는 비 난을 엄청 받았다. 하지만 DJ는 '정당은 정권창출을 위 해 존재한다'며 당시 이기택 민주당과 과감하게 결별, 신당 창당에 나섰고 결국 정권 창출을 이뤘다. 현재 상 황에서 신당 창당은 필연이며 유일할 길이다.

-DJ는 '분열하지 말고 통합의 길로 가라'는 말을 남 겼다.

▲그것은 정당이 올바른 가치와 곧은 방향을 설정했을 때,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분열하지 말라는 뜻이다. 정당 자체가 국민이 외면하고 정권 창출의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결단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다.

되다. --새정치연합으로는 정권 창출이 어려운 이유는. ▲과격한 진보와 좌파적 색채로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 민생을 담을 그릇이 되지 못하며 능력도 없다. 여기에 폐쇄적이고 패거리 정치를 하는 친노 패권주의로는 수권 정당의 비전을 보일 수 없어 국민적 지지를 받을수 없다.

-내년 총선 전망은.

▲정확한 의석을 장담하기 어렵지만 신당이 바람을 일으키면서 제1야당으로 도약할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겨우 명맥만 유지할 것으로 판단한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다당제로 전환된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정치 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당제가 필요하다. DJ도 다당제의 정당 구도에서 DJP연대를 통해 집권했다. 야권이 국회 권력을 잡았을 때도 다당제였다. 다당제는 양당제의 극심한 충돌과 대립을 완충할수 있다. 호남의 현실에서도 다당제가 활로를 모색하는 길이 된다.

-내년 총선에서 동구가 인근의 북구나 남구로 합쳐질 전망이다.

▲강운태 광주시장 시절, 광주 자치구 간의 경계 조정이 있었는데 그 때 북구의 인구를 동구에 과감하게 편입했어야 했다. 당시 강 시장과 광주 국회의원들이 적극나섰으나 북구 갑의 강기정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 이뤄지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광주의 국회의원 의석이 한 석줄게 될 전망이다. 아쉽고 통탄할 일이다.

-호남 정치의 현실을 진단한다면.

호남인도 대선후보 되게 환경조성 다당제로 호남 활로 길 찾아야 내년 총선 광주 의석수 감소 통탄

▲불신과 반목으로 역량이 크게 약화됐다. 이는 '호남으로는 안 된다'는 천박한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창당된열린우리당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 여기에 친노·주류세력에 기생하거나 하청정치에 안주하려는 세력으로인한 불신과 반목이 이어지면서 호남 정치의 가치와 동력을 약화시켰다. 이제 신당을 통해 호남의 가치와 정신을 복원시켜야 한다. 호남 사람도 대선 후보가 될 수있는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호남 민심의 지혜로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의 정치 역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새로운 비전과 가치로 호남 정치를 복원하지 못한 데 책임을 느낀다. 당내 세력화를 하지 못한 것도 아쉬움이 있지만 계파 정치에서 자유로운 측면도 있어 신당 창당의 결심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신당 창당으로 정권 창출의 밀알이 되겠다. 이것이 나의 정치 역정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한 여야 대표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제2의 모바일 공천이다. 친노 패권주의를 위한 제 도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잘못 판단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기초의원 15명 1년간 단독발의 '0'

전체 67명중 22% 차지

지난해 민선 7기 출범 이후 1년 동안 자신이 대표 단독발의(공동발의 제외) 한 조례건수가 '제로'(0)인 광주지역 기 초의원이 무려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 타났다.

기초의원 본연의 임무 중 하나가 입법 활동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직무유기라 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 광주 동구·서구·남 구·북구·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현 재 지역 기초의원 수는 모두 67명으로 이중 15명(22.38%)은 조례안 및 조례개 정안 단독발의가 전무했다.

구별로는 ▲동구 8명(의원 수) 중 2명 (미발의 의원 수) ▲서구 13명 중 2명 ▲ 남구 11명 중 3명 ▲북구 19명 중 2명 ▲ 광산구 16명 중 6명 등이다.

구별 미발의자 비율을 보면 북구가 10.52%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서구 15.38% ▲동구 25% ▲남구 27.27% 등의 순이었다. 광산구는 37.50%로 5개 기초의회 중 가장 높았다.

5개 기초의회 평균은 22.38%로, 북구 의회와 서구의회를 제외하곤 평균을 웃 돌았다. 조례안 및 조례개정안 발의활동만으로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반을 평가할 수 없지만 의정활동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반면 민선 7기 들어 발의된 조례안 등 건수는 모두 130건으로 민선 6기 1년 % 건보다 34건 많았다. 하지만 조례안 중 상당수가 선심성이거나 의회위원회·의 정활동비·의정자문위원운영 등 의회운 영과 관련된 것이어서 지역구의 표심과 자신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만든 조례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 히 일부 조례안은 다른 지역 기초의회의 조례안 등과 비슷해, '실적 쌓기용' 이라 는 비난의 목소리도 많다.

광주시 모 기초의회 관계자는 "각종 지역구 행사엔 얼굴을 꼬박꼬박 내비치 면서도 정작 의정활동엔 소홀히 하는 의 원들이 일부 있다. 지난 1년이 넘도록 단 한 건도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는 것 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기초의원들 스스로가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으로 완 성도 높은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 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설립 가속화

광주연구개발특구(이하 광주특구)에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인 연구소기업 설 립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30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따르면 광주특구에 올해에만 8개사가 신규 등록하는 등 광주특구 지정 후 지 금까지 18개 연구소기업이 탄생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1개사와 2 개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7개사에 이 어 올해 8개사가 신규 등록하면서 꾸준 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이 기술 출자 등을 통해 자본금의 20%이상을 보 유하고 특구 내 설립된 기업으로,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자본 및 경영능력 이 결합해 성과창출이 가능한 사업화 모 델이다.

9월에 등록된 4개 연구소 기업은 연세 대((주)웨어롬), 전남대((주)엔트리생활 건강), GIST((주)지라이다랩, (주)와이텔 포토닉스)의 기술을 출자받아 설립됐다.

(주)웨어롬은 심전도 센서가 부착된 스포츠웨어의 사업을 추진하고, (주)엔 트리생활건강은 항균 및 살균제품의 사 업화를 추진한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부 "北, 대통령 연설 비난・이산상봉 위협 유감"

"8·25 합의 성실 이행 촉구"

정부는 30일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비난하고 이산가 족 상봉 무산을 시사한데 대해 강한 유 감을 표명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 리핑에서 "북한이 대통령의 유엔 연설 등을 일방적으로 왜곡·비난하고, 특히 남북고위급접촉 합의사항이자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해 위태 롭다고 위협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 럽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일방적 주장과 비난,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8· 25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 다"면서 "특히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를 정치·군사적 이유로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는 지난 29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 대통령이 "외세를 등에 업고 흡수통일을 실현해보려는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면서 "이산가족 상봉도 살얼음장 같은 위태로운 상태"라고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